

기술기반 창업기업 중심의 벤처우대제도 법령에 관한 연구*

홍은영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연구교수)**

안기돈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성을현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연구교수)****

국 문 요 약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진입에 발맞추어 벤처기업을 둘러싼 사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벤처기업의 유형과 대상범위의 확대 등 벤처확인제도를 개편 시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시점에서 현재의 벤처 우대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본 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등 법제도 개선 시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법원종합법률 웹페이지에서 ‘벤처’ 를 키워드로 한 탐색을 통해 569개의 관련조항을 확인하여 분석하였고, 569개의 조항에 대한 혜택을 분석하기 위해 규정근거별, 수단별 및 내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규정근거별 분석결과에 의하면 너무 많고 복잡한 법령체계 때문에 벤처우대제도를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혜택수단별의 경우 우대확대가 매우 적고 부담완화에 치중되어 있다. 혜택내용별로는 재무와 생산 분야의 혜택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매우 복잡한 벤처우대관련 조항의 현실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새로운 ‘벤처우대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부담완화에 치중된 혜택수단을 기업성장을 촉진시키는 우대확대 조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무와 생산분야에 치우친 혜택내용을 연구와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개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벤처우대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핵심주제어: 기술기반 창업기업, 벤처우대제도,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제도, 중소벤처기업부

1. 서 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입 본격화로 벤처기업의 사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초기능, 초연결로 특징 지워지는 4차 산업혁명은 산업지형, 국민 삶 등 국가 경제 및 사회 전반의 대변혁을 유발하며, 성공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사업환경에도 상당한 변화를 유발 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세계 각국의 치열한 4차 산업혁명의 헤게모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의 기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적 지원이 새로운 방향에서 분석적·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벤처확인제도의 문제점 노출과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온 바 있다. 1998년 도입되어 2005년 벤처확인제도가 보증 및 대출평가에 의해 벤처확인을 인정하는 시장친

화적 방향으로 개편된 이후, 기술평가 보증 및 대출 유형의 벤처기업에 대한 확인이 급증하며 2012년부터는 매년 1만4천개가 넘는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등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벤처확인 기업 중 90%가 기보나 중진공공의 보증·대출평가로 벤처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 본연의 목적에 맞는 기업들은 벤처확인을 받기 어려운 반면, 벤처기업으로서 혁신역량이 미흡한 기업이 기술보증이나 대출로 인해 쉽게 벤처로 인정받거나, 벤처기업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중소기업까지 벤처확인을 받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한우리경제, 2016).

최근 정부는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발표에 이어 벤처확인제도 전면개편을 제시하였다. 즉,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벤처확인제도의 다양한 문제점 노출로 인해, 정부차원의 대응 필요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벤처생태계 조성대책(중소벤처기업부, 2018)을 발표하며 세부 개선과제로서 ‘벤처확인 주체를 민간 벤처전문가로 변경’, ‘보증대출 유형폐지, 신기술 성장유형 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3081332)

** 제1저자, 국립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연구교수, silver4ever@cnu.kr

*** 교신저자, 국립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과학기술지식연구소장, angidon@cnu.ac.kr

**** 공동저자, 국립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연구교수, ehsung@cnu.ac.kr

· 투고일: 2020-03-11 · 수정일: 2020-04-08 · 게재확정일: 2020-04-23

설’, ‘벤처기업 금지업종 폐지(유흥업종 제외)’, ‘벤처확인기업의 대상 확대(중견기업 포함)’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벤처확인제도의 전면개편은 제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근본적 목적이 있는 바, 우선적으로 벤처확인제도의 혜택인 벤처우대제도의 개선이 선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3년이하가 13.8%, 4~10년사이가 50.2%, 11~20년사이가 28.0%, 21년 이상이 8.0%순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2019). 창업기업은 7년미만의 기업으로, 특히 기술기반의 창업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등을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제도 획득과 더불어 동 제도의 우대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즉, 벤처기업실태조사 통계로 미루어 보았을 때, 7년 동안의 정부지원이 종료되기 전후에 벤처기업을 준비하여 10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벤처확인제도의 도입으로 시행된 벤처우대제도는 그동안 벤처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창업초기 기업이나 20년 업력의 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벤처기업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벤처확인제도의 혁신과 같은 정부정책의 변화, 기존 벤처확인우대제도의 노정된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벤처우대제도의 개편은 그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벤처확인의 유형과 대상범위가 확대되는 벤처확인제도의 변화에 맞춰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적 개선점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포된 벤처법이 관련규정을 갖춰 시행된다면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벤처스퀘어, 2020), 현재 시점의 본 연구는 민간의 벤처기업 확인 평가체계 등을 갖추는 데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연구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벤처확인을 받고 벤처우대제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벤처우대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유형과 대상범위의 확대 등 벤처확인제도의 개편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 우대제도 현황을 분석 한다.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관련연구 문헌을 토대로 조사기반을 형성하고, 제도적 관점, 현황분석,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관한 문헌 조사 실시한다. 이후, 벤처와 관련된 용어를 키워드로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령조사를 통해 제도적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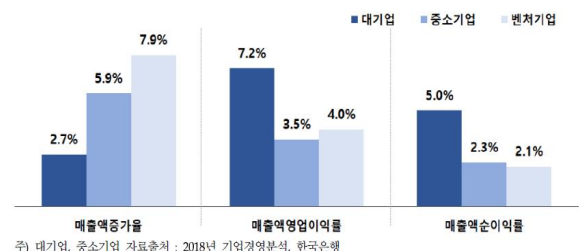
2.1 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용어상 정의는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사업이란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벤처인, 2020)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대기업이 투자를 기피하거나 대기업에서는 나오기 힘든 새로운 상품,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정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능력, 기업가 정신, 창조적 재능을 살려 성장산업이나 신시장, 그리고 고용 창출을 통한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김효중, 2006; 김기완, 2011; 강원진 외, 2012). 특히, 지식정보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 기업의 역량은 원천 기술 또는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장영순·김주미, 2007; 김윤정 외, 2018; 윤주형, 2018). 하지만, 현재까지도 벤처기업에 대한 명확한 학술적 정의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 대상의 한 부분으로써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이영훈·송유진, 2018).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업기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 일본은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인 기업”, OECD는 “R&D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으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벤처인, 2020).

한국의 경우,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즉, 한국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벤처인, 2020). 한편,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로는 2018년 12월말 기준 기업당 평균 매출액 5,321백만원, 평균 자산 5,766백만원, 평균 부채 3,063백만원, 평균 자본 2,70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2019)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중소기업보다 높고 매출액증가율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2018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특히,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5.5%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 2018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매출액연구개발비율 비교

구분	전체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매출액연구개발비율	1.5%	0.7%	5.5%	2.6%	1.4%	4.4%

주) 벤처기업 중 법인기업 1,733개 기업의 2018년 매출액 대비 R&D투자액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함

주)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출처: 2018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2018년 12월말 기준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는 19.8명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확인유형은 기술평가보증기업이 74.1%로 가장 많으며, 이어 기술평가대출기업이 14.7%, 연구개발기업이 6.6%, 벤처투자기업이 4.6%순으로 나타났다. 5대 업종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제조가 41.9%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첨단제조 25.7%, 첨단서비스 18.9%, 일반서비스 11.4%, 기타 2.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4~10년사이가 가장 많은 분포인 50% 수준을 보이고 있고, 기업 성장단계는 고도성장기 기업이 3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성숙기 28.5%, 초기성장기 26.5%, 창업기 4.3%, 쇠퇴기 2.3% 순으로 나타났다.

2.2 기술기반 창업기업

창업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생기업들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Autio, 1997; Drucker, 1985, 이명중·주영진, 2019). 이러한 기업들은 신기술로 제품개발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을 견인역할을 할 수 있는 신산업을 창출하며(Acs & Audretsch, 1990; Storey, 1997; 이명중·주영진, 2019), 전통적인 기업보다 더 뛰어난 성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Cooper et al., 1986).

창업을 분류함에 있어 기술 및 지식 집약 정도를 의미하는 창업혁신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을 기술기반창업(TBE: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이라고 할 수 있다(이명중·주영진, 2019). Bailetti(2012)는 메타연구를 통해 기술기반창업을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기술 지식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별 전문가와 이질적 자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로 정의한 바 있다. 국내에서 창업기업의 제도적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개정 2014.4.14.>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창업자” 정의에 의해 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전체 창업기업 중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높은 26.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25.8%, 제조업 8.9%,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8% 등 순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19) 이러한 업종 중에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7년 이내의 기업을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 정의내리고 있는데(신동평 외, 2018), 해당 업종의 경우 매출액과 고용창출에 있어서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16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전년(200만개) 대비 1.5% 증가한 203만개로 '14년 이후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년(18.4만개) 대비 1.5% 감소한 18.2만개, 지식서비스업은 전년(25.7만개) 대비 0.6% 증가한 25.8만개로 나타났다.

<표 2> 창업기업수 추이(2014~2016년)

(단위:만개)

구분	전체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2016년	203	18.2	25.8
2015년	200	18.4	25.7
2014년	199	17.6	25.7

* 출처 : 창업진흥원(2019.10.29.) 그림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도표로 정리

종사자 수로는 '16년 기준 평균 종사자 수는 3.2명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이 매년 증가세로 각각 평균 6.6명, 5.5명으로 나타났다.

<표 3> 종사자수 추이(2014~2016년)

(단위:명)

구분	전체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2016년	5.9	11.3	6.0
2015년	5.9	10.8	5.7
2014년	5.5	10.7	5.4

* 출처 : 창업진흥원(2019.10.29.) 그림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도표로 정리

매출액에서는 '16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5.9억원이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이 매년 증가세로 각각 평균 11.3억원, 6.0억원으로 나타났다(창업진흥원, 2019).

<표 4> 매출액 추이(2014~2016년)

(단위:억원)

구분	전체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2016년	3.2	6.6	5.5
2015년	3.2	6.4	5.4
2014년	3.2	6.2	4.8

* 출처 : 창업진흥원(2019.10.29.) 그림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도표로 정리

이와 같이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일반 창업기업과는 달리 높은 R&D집중으로 혁신기술 창출을 꾀하며, 독특한 기술우위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무기로 신규시장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신동평 외, 2018).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에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술기반 창업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주력산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함께, 고용창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술기반 창업을 강조하고 있다.

2.3 기술기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동향

DBpia에서 2000~2020년 동안 게재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기술기반 창업’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유효한 문헌 총 28건이 탐색되었다.

즉, 기술기반 창업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문헌 10건(윤호열·김병근, 2017; 이명중·주영진, 2019; 홍길표 외, 2017; 배홍범 외, 2018; 최종열, 2013; 정연수 외, 2019; Lee·Choi, 2014; 김춘근 외, 2014; 이형모 외, 2012; 양수희 외, 2011), 기술기반 창업 사례연구 8건(Seo·Min, 2008; 권기환·최종인, 2015; 서상혁, 2008; 길운규 외, 2017; 심진형 외, 2016; 신창호·김목한, 2013; 길운규 외, 2018, 양현봉 외, 2016), 기술기반 창업활성화 관련 문헌 4건(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2012; 손수정·양은순, 2012; 양영석·김명숙, 2016; Yun 외, 2019), 기술기반 창업모형 관련 문헌 4건(양영석, 2016; 양영석, 2013; 최종인·변영조, 2013; 양태식·민경세, 2007), 기술기반 창업의 유형 및 요인분석 관련 문헌 1건(전향순·이상용, 2015), 기술기반창업기업 비교연구 1건(공혜원, 2019)으로 분류된다. 또한, ‘벤처기업’으로만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매우 방대한 문헌이 존재하여 연구의 분석대상인 벤처의 ‘제도’에 집중하여 문헌을 검색하였다. 즉, ‘벤처 제도’를 키워드로 2000~2020년 동안의 문헌을 검색한 결과, 유효한 문헌 총 13건이 탐색되었다.

즉, 벤처 투자 관련 문헌 3건(이효경, 2019; 양채열, 2018; 정승일, 2005), 벤처 조세 관련 문헌 3건(전병욱, 2016; 서병우·문승권, 2014; 안은정, 2015), 벤처 제도 개선 문헌 3건(송인방, 2012; 이견직, 2000; 이현숙 외, 2012), 벤처 제도 자체에 대한 문헌 2건(김신, 2008; 정대용·김영수, 2000), 벤처 지적재산권 관련 문헌 1건(한철 외, 2002), 벤처 비교 연구 문헌 1건(손열, 2006)으로 분류된다. 이중 벤처 제도 개선과 관련된 문헌 3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송인방(2012)은 유한책임회사제도의 적용상 문제를 중심으로 벤처중소기업과 상법개정을, 이견직(2000)은 의료기기 벤처산업지원제도의 유효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어 본 연구와 전혀 다른 방향의 연구이다.

이현숙 외(2012)는 벤처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벤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벤처확인의 3가지 유형인 보증/대출형, 벤처캐피탈형, 연구개발형에 따른 성과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벤처확인을 받고 우대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 각자의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으로 연구의 차별점이 존재한다.

2.4 최근 정부 정책

2.3.1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최근 개편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골자는 기존에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심으로 운영되어온 벤처확인제도가 개편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운영되고, 기존의 보증·대출실적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성장성 평가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조직도 기업부설연구소 1개 조직만 인정하였던 반면, 개편안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13개 기관투자자 투자만 인정했던 ‘벤처투자기업유형’은 창업기획자인 액셀러레이터가 추가로 인정된다.(벤처투자 5천만원 및 자본금 대비 10% 이상 요건은 현행 유지) 특히,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경우, 기술사업화에 따른 투자, 초기 사업영위를 위한 시드머니가 중요한만큼 벤처기업으로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벤처스퀘어, 2020).

<표 5>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내용

구분	현행	개편 후
확인주체	공공기관 · 기술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심	민간 전문가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중심
확인요건	보증대출기업유형 · 보증 · 대출 실적 · 자산대비 5% 이상 · 기술성 우수 평가	혁신성 · 성장성 평가 · 보증 · 대출 실적 요건 폐지 · 혁신성 · 성장성 평가로 대체
	연구개발기업유형 · 연구개발비 5천만원 및 매출액 대비 5% 이상	4개 연구개발조직으로 확대 ①기업부설연구소 ②연구개발전담부서 ③기업부설창작연구소 ④창작전담부서 · 연구개발비 5천만원 및 매출액 대비 5%이상 요건은 현행 유지
	13개 기관투자자 투자만 인정 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주) 사모집합투자기구 ⑦전문엔젤 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⑬외국투자회사 · 벤처투자 5천만원 및 자본금 대비 10% 이상	투자자 추가 인정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세부목록은 시행령에서 명시할 계획 · 벤처투자 5천만원 및 자본금 대비 10% 이상 요건은 현행 유지

* 출처 : 벤처법 공포...“벤처 생태계 민간 중심으로 바뀐다”(벤처스퀘어, 2020)

1) 기존 연구개발비 5천만원 및 매출액 대비 5%이상 요건은 현행 유지됨.

2.3.2 정부의 창업 정책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년 대비 3조 이상 증가한 13.4조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창업·벤처기업 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한 점은 눈에 띄는데, 3대 혁신산업 분야로 불리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분야의 스타트업에 본격적으로 돕기 위해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450억 원 규모의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스타트업스토리, 2020).

또한, 벤처투자열기의 지속 및 확산을 위해 투자재원의 마중물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2019년 2,400억원에서 8,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3대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 스케일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중 5,200억원이 스타트업 펀드에 출자되는데 창업초기 4,800억원, 청년창업 1,100억원 펀드가 조성되어 혁신기업의 창업단계를 지원하는 점은 특징적이다(플래툰, 2020).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이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TIPS 프로그램 예산에 1951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14.5% 확대된 규모다. 또 기업 성장단계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원 사업을 업그레이드한다(전자신문, 2020).

III. 벤처 우대제도 법령 분석

벤처 우대제도 법령 분석을 분석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법령의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의 위계를 가지게 되는데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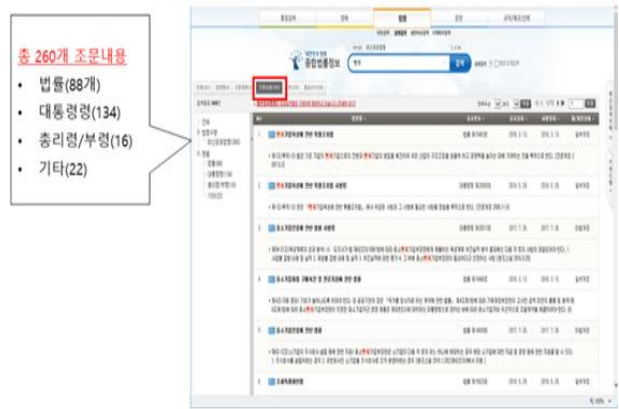
법 또는 법률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드는 것으로 법의 기본 이념, 핵심적인 내용 등만 다루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시행령이란 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만드는 대통령령을 일컫는 것으로 주로 법률에서 위임한 것들과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한다. 시행규칙이란 주로 각 부의 장관이 만드는 부령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한다. 행정규칙이란 고시·예규·훈령 등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말고도 지침, 규정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가 존재하는데, 이는 지역적인 환경, 재정연건등이 너무 달라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정부입법지원센터, 2020).

벤처 우대제도 법령 분석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대한민국법원종합법률(glaw.scourt.go.kr)을 활용하여 ‘벤처’를 키워드로 한 탐색을 통해 관련조항을 확인하고 의미 있는 조문을 관련데이터(법구분, 법령명, 공포번호, 해당 조문)와 함께 추출하여 기본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혜택의 규정근거/수단/내용별로 분석하였다.

3.1 벤처를 인용한 전체 법령 추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벤처’가 조문내용에 포함된 모든 법령을 조회하였다. 총 260개의 법령이 검색되었으나,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값(outlier) 등을 제거하는 정제작업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벤처’를 검색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색된 조문 중에 벤처우대제도와 관련이 없는 법령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법률에서 258개 조, 시행령에서 170개 조, 시행규칙에서 29개 조, 고시·예규·훈령에서 112개로 총 569개의 관련 조항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관련조항을 ‘혜택규정근거별’, ‘혜택수단별’, ‘혜택내용별’로 분류작업 하였다.

• 검색결과 : '조문내용' 탭 선택



<그림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벤처’가 조문내용에 포함된 검색수행화면

3.2 혜택 규정 근거별 분석

벤처를 인용한 법률 목록에서 벤처확인기업의 우대혜택의 규정을 근거별로 조사·분석한 결과, 법률 90개와 행정규칙 11개에서 총 258개 조가 추출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규칙은 시행규칙의 하위개념으로 고시, 훈령, 예규 등을 일컫는다.

법률 90개에서 인용조항이 다수인 법령으로는, 주로 벤처법(41개 조), 조특법(23개 조), 과학기술기본법(11개 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4개 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8개 조), 자본시장법(7개 조), 병역법, 소득세법(각각 5개 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각각 4개 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벤처를 인용한 시행령 목록에서 벤처확인기업의 우대혜택의 규정을 근거별로 조사·분석한 결과, 시행령 80개와 행정규칙 2개에서 총 170개 조가 추출되었다.

벤처를 인용한 시행령 80개에서 인용조항이 다수인 법령으로는, 주로 벤처법 시행령(25개 조), 조특법 시행령(18개 조),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7개 조), 소득세법 시행령(5개 조), 환

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각각 4개 조) 등으로 나타났다.

혜택 규정 근거별 분석을 통해 한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즉, 법령은 법률(258개 조)-시행령(170개 조)-시행규칙(29개 조)-고시·예규·훈령(112개 조)의 위계를 가지게 되는데(법률-시행령, 법률-시행규칙, 법률-예규·훈령으로 중간단계가 생략된 위계도 존재함), 하위로 내려갈수록 벤처우대제도와 관련된 조항이 수가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벤처 우대제도를 혜택 규정별로 분석한 결과 관련 조항이 무려 569개로서 너무 많아서 우대 혜택제도를 알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훈령·예규·기타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매우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복잡하다. 특히, 벤처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행규칙과 고시·훈령·예규·기타 등 실행단계의 제도가 오히려 적은 문제점이 있다.

<표 6> 벤처를 인용한 법률 목록

법률 명	인용 조
전 체	25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4
「조세특례제한법」	23
「과학기술기본법」	1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7
「병역법」, 「소득세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법인세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과학기술유망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디자인보호법」,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발전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생명공학육성법」, 「소금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어촌 발전 기본법」, 「실용신안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양성평등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여성전문금융업법」, 「예술인복지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은행법」, 「자연재해대책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발전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생명공학육성법」, 「소금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실용신안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양성평등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여성전문금융업법」, 「예술인복지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은행법」, 「자연재해대책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정진흥법」, 「주택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지법」, 「특허법」, 「한국산업은행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1
관련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기타)	11

* 법(률)이 2개 이상이 언급된 경우 각각의 인용조항 수를 의미함.

<표 7> 벤처를 인용한 시행령 목록

시행령 명	인용 조
전 체	17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7
소득세법 시행령	5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병역법시행령」,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상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여성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정보보호산업의	1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조경진흥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초지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1
관련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기타)	2

* 시행령이 2개 이상이 언급된 경우 각각의 인용조항 수를 의미함.

3.3 혜택 수단별 분석

벤처를 인용한 법률 목록에서 벤처확인기업 우대혜택을 혜택수단별로 조사분석한 결과, 부담완화 97%, 우대확대가 3%로 나타나 대부분의 혜택수단에 해당하는 성격이 ‘부담완화’ 관련 법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혜택수단별 법률 비중

구분	부담 완화	우대 확대
비율	97%	3%

부담완화 측면으로는 감면(이연)이 13개 법 46개 조, 의무배제·연기가 7개 법 13개 조, 허용이 44개 법 113조(행정규칙 3개 조 포함), 지원이 23개 법 35조 (행정규칙 7개 조 포함), 요건하향, 수수료인하가 15개 법 27개 조로 나타났다

<표 9> 혜택수단별 법률 목록(부담완화)

법률명	인용 조*
총계	23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3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4
조세특례제한법	23
과학기술기본법,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기타)	10
지방세특례제한법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7
소득세법, 병역법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4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3
국유재산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방위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국가공무원법, 자연재해대책법,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주택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 우체국보통특별회계법, 국민연금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보험업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사립학교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국제징수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경진흥법, 기술보증기금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생명공학육성법, 중간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소금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초지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특허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산업디자인진흥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산업발전법, 상법	1
--	---

* 법(률)이 2개 이상이 언급된 경우 각각의 인용조항 수를 의미함.

부담완화 측면에서 그 조항의 성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입지(73개 조), 투자(41개 조), 연구(30개 조), 소득(26개 조), 인력(19개 조), 주식(17개 조), 설립(12개 조), 합병(10개 조), 기타(9개 조), 수출 및 벌금(각 1개 조)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법령은 벤처법(39개 조), 산업집적활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4개 조), 조특법(23개 조), 과학기술기본법(10개 조), 지방세특례제한법(8개 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7개 조), 병역법, 소득세법(각 5개 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각각 4개 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대확대 측면에서는 가점부여가 6개 법 7개조(행정규칙 1개 조 포함), 한도 상(하)향이 5개 법, 5개 조로 나타났다.

우대확대 측면에서 그 조항의 성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소득(7개 조), 투자(4개 조), 연구, 주식(각 2개 조), 설립, 기타(각 1개 조)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혜택수단별 법률 목록(우대확대)

법률명	인용 조*
총계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학기술기본법,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기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인세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1

* 법(률)이 2개 이상이 언급된 경우 각각의 인용조항 수를 의미함.

또한, 관계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각 3개 조), 과학기술기본법, 법인세법, 벤처법, 상속증여세법, 은행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한국산업은행법(각 1개 조)으로 나타났다.

우대확대 조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물품적격심사 또는 일반용역적격심사시에 벤처, 이노비즈 기업등에 가점 0.6~3.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에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등에 신인도 및 기술능력평가에서 1.5~3.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대혜택을 혜택수단별로 '부담완화'와 '우대확대'의 2가지 차원으로 분석한 결과, '부담완화'가 97%로 나타나 벤처우대제도 관련법령은 대부분 '부담완화'에 매우 치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완화는 주로 법인세, 재산세 등의 세금감면이 주로 이로 인한 벤처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주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있어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우대확대는 조달우수제품 심사나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판로개척을 위한 TV·라디오 광고비 할인 등 벤처기업의 시장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격이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 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4~10년사이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해당시기의 벤처기업은 성장이 필요한 단계로 부담완화 보다는 우대확대 제도를 대폭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3.4 혜택 내용별 분석

벤처를 인용한 법률 목록에서 벤처확인기업 우대혜택을 혜택 내용별로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재무 110개, 생산 105개의 벤처 관련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는 주로 '투자 및 소득'에, 생산은 주로 '입지'에, 연구는 주로 '연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기술개발)는 21개 법 32개 조로 나타났다. 생산 측면에서는 입지가 29개 법, 73개 조, 인력이 15개 법, 19개 조, 설립이 12개 법, 13개 조로 나타났다.

재무 측면에서는 주식이 6개 법 19개 조, 투자가 23개 법 47개 조, 합병이 5개 법, 10개 조, 소득 등이 16개 법 34개 조로 나타났다.

<표 11> 혜택 내용별 비율

구분	연구	생산	재무	기타
비율	12.4%	40.7%	42.6%	4.3%

<표 12> 혜택 내용별 법령

* 연구(기술개발)	* 생산	* 재무
- 21개 법 32개 조	- 입지 : 29개 법, 73개 조 - 인력 : 15개 법, 19개 조 - 설립 : 12개 법, 13개 조	- 주식 : 6개 법, 19개 조 - 투자 : 23개 법, 47개 조 - 합병 : 5개 법, 10개 조 - 소득 등 : 16개 법, 34개 조

<표 13> 혜택 내용별 법령 현황

연번	구분	혜택 내용 (그룹)				
	혜택내용	재무	생산	연구	기타	계
	계	110	105	32	11	258
1	기타				10	10
2	벌금	1				1
3	설립		13			13
4	소득	33				33
5	수출				1	1
6	연구			32		32
7	인력		19			19
8	입지		73			73
9	주식	19				19
10	투자	47				47
11	합병	10				10

결과적으로, 우대혜택을 혜택내용별로 '재무', '생산', '연구', '기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재무 및 생산과 관련된 조항으로 나타나 '연구'와 관련된 조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관련 혜택 조항을 확대하는 것은 연구개발기업유형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성 및 성장성 평가를 신설한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에도 부합한다. 벤처기업의 인력확보 문제도 매우 심각하지만 인력확보를 위한 우대제도도 매우 부족하다. 또한 벤처기업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어려운 요인인 시장개척을 위한 혜택은 전혀 없다. 결과적으로 최근 공포된 벤처법의 취지와 맞게 혁신성과 성장성에 부합하면서도, 벤처기업 중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평균업력 4~10년 사이의 기업 수요를 고려한 벤처우대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3.5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요 우대혜택 비교

벤처기업 우대혜택 제도 중에 창업기업 우대혜택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도정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세제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외에도 등록면허세, 지방세과세특례 등 다양한 지원구분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거론되며 많이 활용되고 있는 법인세 및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우대혜택에 대해서 비교하고자 한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간 100%감면, 청년이 아닌 창업기업의 경우 연수입에 따라 50~100%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벤처기업은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감면이며 기타업종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수입4,800만원초과의 신성장 창업기업과 신성장 벤처기업의 지원내용은 창업일로부터 3년간 75%감면, 이후 2년간 50%감면으로 동일하다. 즉, 두 그룹간 지원내용의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취득세와 재산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14> 지원대상별 세제혜택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대상 세부구분	지원내용
법인세 소득세	청년창업 중소기업(①)	-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수도권과밀은 50%)
	청년이 아닌 창업 중소기업(②)	연수입4,800만 원이하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수도권과밀은 50%)
		연수입4,800만 원초과 (신성장)	창업일로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수도권과밀X)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 중소기업(③)	연수입4,800만 원초과 (기타업종)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수도권과밀X)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일로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수도권과밀외X)	
취득세	청년창업중소기업(①)	-	창업일부 4년간 75% (수도권과밀역제권역 내 지역 해당없음)
	①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중소기업(②)	-	창업일부 4년간 75% (수도권과밀역제권역 외 지역 해당없음)
재산세	청년창업중소기업(①)	-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단, 수도권과밀역제권역 내 해당없음)
	①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중소기업(②)	-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단, 수도권과밀역제권역 외 해당없음)

*출처: 2018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췌하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과의 비교를 위해 내용 정리

금융 및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 또는 창업기업에 비해 벤처기업의 혜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보보증한도는 일반기업보다 높은 50억원한도의 보증과 보증료율 0.2%p 감면의 혜택이 있다.

코스닥상장심사기준과 정책자금한도우대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에게 유일한 심사기준과 자금상향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창투자투자자의무에서는 창업기업의 경우 등록 후 3년까지, 업력7년이내로 40%이상 투자자의무이나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표 15> 지원대상별 금융 및 투자 혜택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보 보증 한도	일반기업	기보 보증한도 30억원
	벤처기업	기보 보증한도 50억원 기보 보증료율 0.2%p감면
	상장 벤처기업	기보 보증한도 70억원 기보 보증료율 0.2%p감면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	벤처기업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최소업력 : 3년→미적용 -자기자본 : 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 : 10%→5% -당기순이익 : 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 및 기준시가총액 300억원이상→매출액50억원 및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설립후 경과연수 적용면제)

정책 자금 한도 우대	벤처기업	-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 한도 (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 (150%→미적용)
창투자 투자 의무	창업기업, 벤처기업	▶창업투자회사 투자자의무(등록 후 3년까지 업력 7년 이내 창업자 등에 40% 이상 투자) 대상 중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업력제한 미적용 ▶창투사의 투자는 창업자, 벤처기업등에 50% 이상을 투자해야함

*출처: 2018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췌하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과의 비교를 위해 내용 정리

결국 세제혜택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금융 및 투자 혜택의 경우는 오히려 벤처기업 우대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IV.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벤처기업확인시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 벤처우대관련 조항의 현실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벤처우대제도는 혜택수단별, 혜택내용별로 정부부처별로 다양한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즉, 법률258개 조, 시행령 170개 조, 시행규칙29개 조, 고시·예규·훈령 112개로 총 569개의 관련 조항이 촘촘하게 존재하나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훈령으로 갈수록 우대와 관련된 조항의 수가 현저히 적어진다.

이는 벤처우대관련 조항이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시행규칙, 고시·예규·훈령의 확대 등으로 제정된 법률이 적극 활용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벤처우대제도는 주로 ‘부담완화’에 치중되어 있어 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대제도를 혜택수단별로 ‘부담완화’와 ‘우대확대’의 2가지 차원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대부분 ‘부담완화’에 몰린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조항의 내용이 감면(이연), 의무배제·연기, 허용, 요건하향, 수수료인하 등인 점에서 어느정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가 큰 폭으로 성장한 기업에게 주로 혜택의 초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실,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7년까지 사업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그 이후에 스케일업에 집중한다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기술기반 창업기업에는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은 우대제도로 판단된다.

가점부여, 한도상(하)향과 관련된 ‘우대확대’측면의 우대제도가 기술기반 창업기업에는 더욱 실효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우대제도 법령 제정 확대 등 제도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9)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 해당 제도는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납품실적이 없어 초기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결정을 대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우수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납품 기회를 갖게 된다.

셋째, 벤처우대제도는 주로 ‘비연구’분야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 ‘연구’분야의 혜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대제도를 혜택내용별로 ‘재무’, ‘생산’, ‘연구’ 등 차원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대부분 ‘재무’(42.6%)와 ‘생산’(40.7%)과 관련된 조항인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연구’와 관련된 우대제도는 전체의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육성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벤처기업은 다른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일반 창업기와 달리 높은 R&D집중으로 혁신기술창출을 꾀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벤처확인제도가 기존 보증·대출 실적 요건 폐지되고 혁신성·성장성 평가로 대체됨에 따라 벤처기업의 시장개척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인력난 해소와 기술혁신을 위한 혜택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재무와 생산에 치중되어 있는 벤처우대제도를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벤처우대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로 활용되는 벤처우대제도에서 ‘금융 및 투자’와 관련된 벤처기업의 혜택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확실한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제’ 혜택에서는 이 둘간의 혜택이 유사하여 차별성이 찾기가 어렵다. 이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예를 들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업력인 7년이 초과되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 아무런 세제혜택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혜택수혜기간이 짧은 세제지원 등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제도와 현장간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이를 찾아내기 위한 행·재정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한계점

2020년 국내 신규벤처에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6년 2개에 불과했던 유니콘은 11개로 늘며 대한민국은 국가별 유니콘 순위에서 당당하게 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최근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제2벤처붐 확산과 연계해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2019년 2,400억원에서 2020년 8,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2020년 2월 11일 공포하였다. 특히,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혁신 벤처기업을 정부 주도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완전 민간이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즉, 민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등을 중점 심의·확인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기 적절한 시점에서 기술기반 창업기업 중심의 벤처 우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이는 법이 공포되고 약 1년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이의 개선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제도의 사각지대, 현실적인 시행규칙 마련, 지원의 쏠림분야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걸맞은 벤처확인 제도로써 종합적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그에 걸맞은 벤처우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제약과 예산의 부족으로 종합적 검토를 수행하지 못하였는바, 차기 연구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종 우대제도에 대한 벤처기업 대상 실증분석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REFERENCE

- 강원진·이병환·오왕근(2012).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외부자원 활용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7(1), 35-45.
- 공혜원(2019). 글로벌 국가 비교를 통한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진단: 정량 및 정성 연구. *벤처창업연구*, 14(1), 101-116.
- 권기환·최종인(2015). 기술벤처의 실패요인 분석: 연구소 창업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4), 27-37.
- 길운규·배홍범·심용호·김서균(2017). 창업기업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515.
- 길운규·안기돈·김서균(2018). 대전 기술창업 생태계 연구. *경영경제연구*, 40(1), 263-291
- 김기완(2011).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확인유형을 중심으로(2011-14)*,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김신(2008). 부문별 핵심 중소기업 지원제도 (5)-벤처·창업기업 지원제도(소상공인·재래시장 지원제도/여성기업 지원제도. *세라미스트*, 11(6), 42-64.
- 김윤정·서운교·홍정임(2018). 벤처기업의 내부역량과 성장단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부 지원자금 활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1(2), 636-662.
- 김춘근·이종석·김진수(2014). 기술창업기업 초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연구(구 동림경영연구)*, 57, 63-86.
- 김효중(2006).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경기대학교
-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19).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Retrieved

- 2020.03.11. from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114>.
- 배홍범·송민경·김서균(2018). ETRI 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기업의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3(1), 61-72.
- 벤처스퀘어(2020). *벤처법 공포... 벤처 생태계 민간 중심으로 바뀐다*, Retrieved 2020.03.11. from <https://www.venturesquare.net/802250>.
- 벤처인(2020). *벤처기업이란*, Retrieved 2020.03.11. from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1100.jsp>.
- 서병우·문승권(2014).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및 정책적 개선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173-182.
- 서상혁(2008). *서남권 지역발전을 위한 기술창업의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정책자료 2008-22)*,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손수정·양은순(2012). *대학 R&D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및 정책 개선방향(정책자료 2012-02)*,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손열(2006). 기술, 제도, 경로의존성: 정보화시대 벤처지원정책의 한·일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0(3), 237-261.
- 송인방(2012). 벤처중소기업과 상법개정: 유한책임회사제도의 적용상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48, 349-375.
- 스타트업스토리(2020). *2020년 창업 정책*, Retrieved 2020.03.11. from <https://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9133>.
- 신동평·배용국·손석호(2018).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정책의 현재와 시사점(2018-08(통권 제226호))*,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신창호·김묵한(2012). *서울시 기술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방안(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 서울연구원
- 심진형·윤원수·고태조(2016). 3D 프린팅 기술 기반 창업 성공 사례. *한국기계가공학회지*, 15(2), 104-110.
- 안은정(2015).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고찰: 미국의 과세제도를 중심으로. *조세와 법*, 8(1), 195-226.
- 양수화·김명숙·정화영(2011). 기술창업기업의 기업가 역량과 기술사업화 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사)한국벤처창업학회 1-23
- 양영석(2013). BSC (Balanced Scorecard) 기반의 기술창업교육 성과평가모형 개발 연구: 창업대학원 성과평가지표 분석과 개선방안도출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8(2), 129-139.
- 양영석(2016). 공공기술기반 기술창업의 현황과 글로벌 성과제고 위한 '국내기반형 글로벌 창업 (Inbound Globalization)' 모델 연구. *벤처창업연구*, 11(3), 27-35.
- 양영석·김명숙(2016). 성공적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사전자가진단 (Self-Checkup Preparation) 항목 개발연구. *벤처창업연구*, 11(2), 113-120.
- 양채열(2018).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전략과 기술탈취문제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송펀드 활성화를 중심으로. *재무관리연구*, 35(2), 165-181.
- 양태식·민경세(2007). 현행 기술가치 평가모형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신기술 창업기업의 경우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2(2), 93-120.
- 양현봉·박종복·설병문(2016). 한국의 여성 지식기술창업의 특성에 관한 탐색연구. *한국혁신학회지*, 11(1), 113-141.
- 윤주형(2018). *전력분야 중소기업의 고객지향성과 기술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학교
- 윤호열·김병권(2017). 지역의 환경적 요인이 기술기반 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혁신거점기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5), 35-46.
- 이건직(2000). 의료기기 벤처산업지원제도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 방안. *보건복지포럼*, 2000(6), 55-68.
- 이명종·주영진(2019). 기술기반창업기업의 기업활동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4(6), 59-76.
- 이영훈·송유진(2019). 정부지원자금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내부역량의 매개효과와 기업 성장단계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2), 31-46.
- 이현숙·이상우·김한얼·이상명(2012). 벤처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벤처 활성화 방안. *Korea Business Review*, 16(2), 211-228.
- 이형모·김명숙·김응규(2012). 기술창업기업의 특허활동이 초기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7(3), 45-53.
- 이효경(2019). 일본의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관련 증권시장의 변화와 차등의결권제도의 입법동향. *경영법률*, 29(2), 239-265.
- 장영순·김주미(200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따른 애로요인의 실증적 연구. *산업공학*, 20(3), 418-426.
- 전병욱(2016).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및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5(1), 159-204.
- 전자신문(2020). *창업지원사업*, Retrieved 2020.03.11. from <https://m.etnews.com/20200110000233?obj=Tzo4OiJzdGRDbGFzcyY6Mjpp7czo3OiJyZWZlcmVyljttOO3M6NzoiZm9yd2FyZCI7czo3Mzoid2ViIHRvIG1vYm95ZSI7fQ%3D%3D>.
- 전향순·이상용(2015). AHP 에 기반을 둔 기술창업 요인 분석 시스템. *디지털융복합연구*, 13(4), 311-317.
- 정대용·김영수(2000). 벤처기업의 창업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평가와 벤처생태계 모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 163-196.
- 정부입법지원센터(2020). *법령의 본질*, Retrieved 2020.03.11. from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
- 정승일(20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자와 기술금융제도(혁신정책 Brief)*,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연수·윤동주·조성희(2019). 기술창업기업에서 기업가의 비즈니스 모델 인식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6), 803-816.
- 중소기업창업·창업진흥원(2012). *대학 및 연구기관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서울: 창업진흥원
- 중소벤처기업부(2018).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발표, Retrieved 2020.03.11. from <https://www.k-startup.go.kr/common/attachFileView.do?attachSn=203786>.
-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2019).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서울: 중소기업부.
- 창업진흥원(2019). *통계로 보는 창업동향*, 서울: 창업진흥원.
- 최종열(2013). 기술창업기업의 기술보유유형과 성과와의 관계. *벤처창업연구*, 8(1), 29-36.
- 최종인·변영조(2013). 융합기반의 대학원 기술창업 교육모델 개발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8(2), 119-128.
- 플래툰(2020). *모태펀드*, Retrieved 2020.03.11. from <https://platum.kr/archives/136211>.
- 한우리경제(2016). *벤처확인제도 실효성 논란*, Retrieved 2020.03.11. from <http://www.hanuribiz.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36>.

- 한철·함철훈·김원규(2002). 벤처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한 지적재산담보제도. *기업법연구*, 9, 167-212.
- 홍길표·최종인·장승권(2017). 공공기술기반 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 특성과 성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형 I-Corps 사업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20(4), 271-292.
- Ahn, E. J.(2015). A study of a stock option in the venture companies - focused on the US tax system. *Tax and Law*, 8(1), 195-226.
- Acs, Z. J., & Audretsch, D. B.(1990). *Innovation and Small Firms*, Cambridge, MA: MIT Press.
- Autio, E.(1997). New technology-based firms in innovation networks symplectic and generative impacts, *Research Policy*, 26, 263-281.
- Bae, H. B., Song, M. K., & Kim, S. K.(2018). A Study on the Impact of Competency of Technology : Based Startups on Performance Using ETRI Technolog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1), 61-72.
- Bailetti, T.(2012). Technology entrepreneurship: Overview, definition and distinctive aspects,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February, 1-15.
- Chang, Y. S., & Kim, J. M.(2007). An Empirical Study on High-technology Innovative SMEs' Characteristics and their Bottlenecks across the Growth Stages, *IE interfaces*, 20(3), 418-426.
- Choi, J. Y.(2013). Concreteness of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of technology based Start-up compan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1), 29-36.
- Choi, J. I., & Byun, Y. J.(2013). The Exploratory Study on Development of Interdisciplinary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on Model,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2), 119-128.
- Cooper, A. C, Willard, G. E., & Woo, C. Y.(1986). Strategies of high-performing new firms: A reexamination of the niche concep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 247-260.
- Drucker, P. F.(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Harper & Row.
- Electronic Times(2020). *Entrepreneurship Support Business*, Retrieved 2020.03.11. from <https://m.etnews.com/20200110000233?obj=Tzo4OiJzdGRDbGFzcyI6MjM7c3OjYyZWZlcmVjIj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
- Gil, W. G., An, G. D., & Kim, S. K.(2018). A Study of the Daejeon Tech Startup Ecosystem,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40(1), 263-291.
- Gil, W. G., Bae, H. B., Shim, Y. H., & Kim, S. K.(2017). A study on how to improve startup support policies, *Conference on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Fall 2017*, 515.
- Han, C., Ham, C. H., & Kim, W. K.(2002).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ecurity system for venture business' funding, *Business Law Review*, 9, 167-212.
- Hanuribiz(2016). *Controversy over the effectiveness of venture verification system*, Retrieved 2020.03.11. from <http://www.hanuribiz.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36>.
- Hong, K. P., Choi, J. I., & Jang, S. K.(2017).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s of Public Science and Technology-based Startup Training Program : An Exploratory Study of Korean I-Corps program,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20(4), 271-292.
- Jeon, H. S., & Lee, S. Y.(2015). AHP-based Technology Start-ups Factors Analysis Syst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4), 311-317.
- Jeong, Y. S., Yoon, D. J., & Cho, S. E.(2019). Entrepreneur's Business Model Thinking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Technology-based Start-up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6), 803-816.
- Jun, B. W.(2016). How to Revise Tax Laws and Accounting Principles for Stock Option Schemes of Venture Firms, *Tax and Accounting Research*, 5(1), 159-204.
- Jung, D. Y., & Kim, Y. S.(2000).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al Supporting Stages and the Ecosystem Model for Venture Companies, *Journal of Social Sciences*, 2, 163-196.
- Jung, S. I.(2005). *Europe and Germany Venture Investment and Technology Finance System(Innovation policy Brief)*, Seou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Kang, W. J., Lee, B. H., & Oh, W. G.(2012). The Effects of the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Along the Stages of Growth in Korean Ventur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35-45.
- Kim, C. K., Lee, C. S., & Kim, J. S.(2014).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Early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Korea Corporate Management Research*, 21(5), 63-86.
- Kim, K. W.(2011). *Research on the growth factors of venture companies: focusing on the type of venture verification(2011-14)*, Seoul: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 Kim, H. J.(2006). *An Empirical Study on Influences on the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 Venture Busines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Kyonggi University.
- Kim, S.(2008). Core system support system by sector(5): Venture, start-up company support system/Small business and traditional market support system/Women's company support system, *The Korean Ceramic Society*, 11(6), 42-64.
- Kim, Y. J., Suh, Y. K., & Hong, J. I.(2018). The Effects of Internal Competence and Growth Stages on the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the Moderating Effect in Connection with Government Funding Utilization,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21(2), 636-662.
- Kong, H.(2019). Korean Start-up Ecosystem based on Comparison of Global Countri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1), 101-116.
-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 Development(2019). *Statistics start-up trends*, Seoul: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2020). *The nature of the Legislation*, Retrieved 2020.03.11. from <https://www.lawmaking.go.kr/lmKnlng/jdgStd/info>.
- Korea Policy Briefing(2019). *Technology development product trial purchase system*, Retrieved 2020.03.11. from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114>.
- Kwon, K. H., & Choi, J. I.(2015). The Analysis of Failure Causes on Technology Venture : A Start-up case of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GRI),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4), 27-37.
- Lee, H. K.(2019). Legislative Trends of Multiple Voting Shares and Changes of Stock Market in Financing of Startups and High-Tech Ventures in Japan, *Management Law*, 29(2), 239-265.
- Lee, H. M., Kim, M. S., & Kim, E. K.(2012). A study of the Patent-related Activities affecting the Early Stage Company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3), 45-53.
- Lee, K. J.(2000). Effectiveness evaluation and improvement plan of medical device venture industry support system, *Health and Welfare Forum*, 2000(6), 55-68.
- Lee, H. S., Lee, J. W., Kim, H. Y., & Lee, S. M.(2012). Evaluation and Suggestions on Venture Policies in Korea, *Korea Business Review*, 16(2), 211-228.
- Lee, M. J., & Joo, Y. J.(2019). The Effect of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TBE) Activities on Firms Growth,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6), 59-76.
- Lee, Y. H., & Song, Y. J.(2019).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Funding on Venture Firms' Management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Firms' Internal Competencies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Firm's Growth Stage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2), 31-46.
- Lee, Y. M., & Choi, Y.(2014). A Study on the Positive Signals of New Technology-Based Ventures to Entice Venture Capitals in Korea: Exploring Human Capitals and Strategic Endorsem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23-35.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18). *Announcement of "Private-oriented" Venture Ecosystem "and Innovation Measures"*, Retrieved 2020.03.11. from <https://www.k-startup.go.kr/common/attachFileView.do?attachSn=203786>.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2019). *2019 Venture Business Survey*, Seoul: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Platum(2020). *Fund of Funds*, Retrieved 2020.03.11. from <https://platum.kr/archives/136211>.
- Seo, B. W., & Moon, S. K.(2014).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Policy Improvement of Tax-Aid Systems for Venture Business and Small & Medium Firm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173-182.
- Seo, J. W., & Min, K. S.(2008).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Business Model Planting & Check Framework for Start-ups Entrepreneu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3(1), 73-103.
- Seo, S. H.(2008). *A Study on the Actual Status and Development Policy of Technology-Based Venture Business in South-Western Area(Policy Data 2008-22)*, Seou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Shin, C. H., & Kim, M. H.(2012). *A Study on the Strategy to Build a Virtuous Cycle of Technology-based Start-up Ecosystem in Seoul*, Seoul: Seoul Institute.
- Shin, D. P., Bae, Y. K., & Son, S. H.(2018). *Current and Implications of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y(2018-08 Passage No. 226)*, Seoul: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 Shim, J. H., Yun, W. S., & Ko, T. J.(2016). Successful Examples of 3D Printing Technology-based Start-up Enterpris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Process Engineers*, 15(2), 104-110.
-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2012). *Ways to activate technology entrepreneurship from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Seoul: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 Son, S. J., & Yang, E. S.(2012). *University R & D-base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activation plan and policy improvement direction(Policy Data 2012-02)*, Seou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Son, Y.(2006). Technology, Institutions, Path Dependence : A Comparative Study of Venture Nurturing Policies in Korea and Japan, *Journal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40(3), 237-261.
- Song, I. B.(2012). Small Venture Businesses and Amended Commercial Law : Focused on the Issue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aw Research*, 48, 349-375.
- StartupStory(2020). *2020 Start-up Policy*, Retrieved 2020.03.11. from <https://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9133>.
- Storey, D. J.(1997). *Understanding the Small Business sector*, London: International Thomson Business Press.
- Venture Square(2020). *Proclamation of Venture Law... "Venture ecosystem becomes a private"*, Retrieved 2020.03.11. from <https://www.venturesquare.net/802250>.
- Yang, C. Y.(2018). A Game Theoretic Approach to Venture Capital's Exit Strategy and Technology Theft: Focusing on Punitive Damages, *Financial Management Research*, 35(2), 165-181.
- Yang, H. B., Park, J. B., & Seol, B. M.(2016).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and technology-based women entrepreneurship in Korea, *Innovation Studies*, 11(1), 113-141.
- Yang, S. H., Kim, M. S., & Jung, H. Y.(2011).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bility of technology start-ups on management

- performance.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Summer 2011*,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 Yang, T. S., & Min, K. S.(2007).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Technology Valuation Solutions;focused on high technology based start-up compan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2(2), 93-120.
- Yang, Y. S.(2013). A study for Developing Performance Assessment Model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on Based on BSC - A Case Study to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2), 129-139.
- Yang, Y. S.(2016). ‘Inbound Globalization’ Model for Enhancing the Global Performance of High-Tech Startups from GRI(Government Research Institutions) with Diagnosing the Its Defec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27-35.
- Yang, Y. S., & Kim, M. S.(2016). Case Study of Applying Self-Checkup Preparation for the Successful Technology Based Startu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113-120.
- Yoon, H. Y., & Kim, B. K.(2017). The Influence of regional environment factor on Technology-based firms’ Performance: Moderator effect of Innovation Intermediari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5), 35-46.
- Yoon, J. H.(2018). *A Study on the Impact of Customer Orientation and Technology Competence on Management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in Electric Power Sector*,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 Yun, J. K., Kwon, J. C., & Choi, S. H.(2019). 혁신성장기반 공공 연구자 중심의 기술창업 활성화 정책연구. *산경연구논집*, 10(2), 51-6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 Analysis of Venture Preferential System on Technology-based Startups*

Hong, Eun-Young**

An, Gi-Don***

Sung, Eul-Hyun****

Abstract

In the rapidly changing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business environment surrounding venture companies is also changing rapidly.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reorganized the venture verification system, including expanding the types and scope of venture companies.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venture preferential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y-based start-up companies and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a plan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For analysis, The relevant provisions were confirmed through a search using “venture” as a keyword in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and the Korean Court of General Law. Then, meaningful texts were extracted along with relevant data to secure basic data and analyzed by benefits, by means and by content.

As a result of the study, Venture preferential treatment system is focused on 'reduction of burden' by the means of benefits, and on 'financial' and 'production' by benefits.

In conclusion, four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presented. First,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venture-related clauses. Second, the venture preferential treatment system is mainly focused on mitigating the burden, so efforts are needed to find a balance. Third, the venture preferential treatment system is mainly focused on the 'non-research' field, so the benefits of the 'research' field should be expanded. Finally, efforts to discover and overcome blind spots in the venture preferential system should be supported.

Keywords: Venture preferential system, Venture Company, Preferential System, Startups, Technology-based Startups, Technology Startup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5C2A03081332)

** First author, Science Technology Knowledge Research Institute / Research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ilver4ever@cnu.kr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Management and Accounting /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gidon@cnu.ac.kr

**** Coauthor, Science Technology Knowledge Research Institute / Research Professor, Chungnam University, ehsung@cnu.ac.kr